

# 환경정책의 흐름과 주요 환경정책방향



문 정 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 02-2110-7940 jungho1113@m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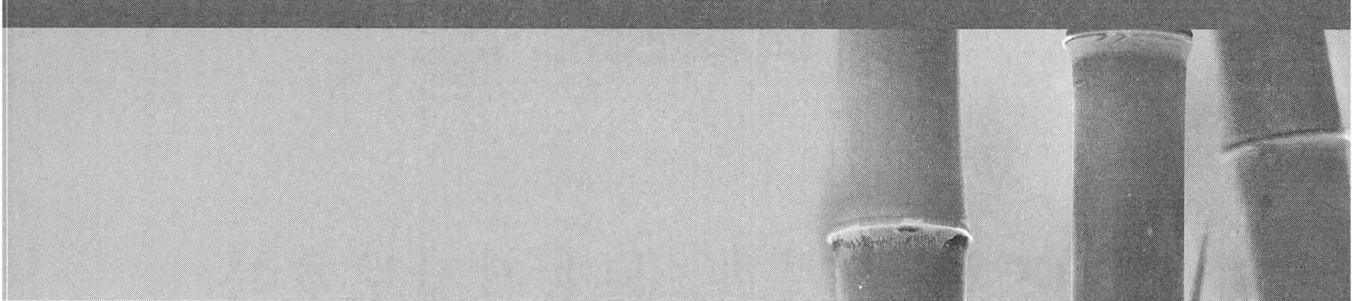
〈 필자약력 〉

- '81. 4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 '92. 6 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실
- '96. 7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장
- '98. 5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장
- '99. 12 환경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 '01. 9 환경부 공보관
- '02. 8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 '03. 6 국외훈련 파견(미 노스캐롤라이나대)
- '04. 7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05. 8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 '06. 3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06. 6 (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환경행정이 본격 시행된 지 4반세기가 지났다. 환경청에서 환경처로 그리고 환경부로 성장한 환경조직은 이제 한 세대를 맞이한다. 환경관련 법률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해 44개에 이르고, 다양한 정책이 개발·집행되고 있다.

환경행정의 괄목할만한 발전은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 개편한 90년대 초부터라 할 수 있다. 낙동강 폐놀 오염 사고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환경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본격적인 환경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선진형 대책보다는 환경현안 위주의 대응적인 대책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환경정책 성과를 들면, 연이은 수질 오염 사고에 대응한 물관리종합대책, 쓰레기 종량제 시행, 대기오염특별대책 지역 지정 등이 있다. 당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한 시화호의 오염은 사회문제화되어 지금껏 환경행정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시화호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보편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환경을 사회적 비용이 아닌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부는 자원수요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주

력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속에서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민의 정부인 당시 사전예방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4대강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환경산업육성과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동강 댐 백지화 선언이 이루어지고, 동강 댐 백지화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한 물절약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환경을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고 국민 참여와 협력, 수용체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넘어 사회의 균형발전까지 아우르는 환경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환경부는 환경용량기반의 수용체 중심 통합관리를 환경행정의 접근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렇듯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의 개선'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 그리고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균형발전'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부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환경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정책의 대국민친화성을 강조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7대 수요자를 선



정하여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7대 수요자란, 도시민(일반국민), 어린이·청소년·노약자, 산업계, 농어민, 자연(동·식물), 지역사회, 국제사회를 말한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 환경행정 여건을 살펴보면, 대내적으로는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 수요증가로 전국에 걸쳐 국토환경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질적 환경서비스요구와 환경성질환 등 건강 중심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기업의 환경 규제완화 요구는 환경행정에 큰 압박으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통합화 및 블록화로 환경과 무역이 연계되고, 지구온난화와 같이 환경 문제의 전 지구화로 새로운 지구환경 규범의 이행요구 증대와 동아시아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화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잘 적응하여 환경정책을 추진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환경부는 국가 환경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기반 구축에 두고 국민, 자연생태 등 환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관리 방안 및 수요자 관점에서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공방안을 중점 제시할 계획인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첫째, 도시 정주환경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도시지역 자연환경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시행, 고품질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을 하고자 한다.

둘째, '환경보건10개년 종합계획' 과 '어린이 환경보건대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환경오염에 취약한 산모, 어린이, 노인계층 등에 대한 환경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도·농간 상수도 서비스

격차도 조기 해소하여 지역간·세대간 형평성 있는 환경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생태계 보호 및 국토환경관리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로 한반도 고유종을 발굴·확인하며 해외생물자원 확보와 국가생물자원관리능력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성평가의 실효성제고와 제도개선, 사전예방조치의 강화를 통해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제고하고, 수계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수생태 건강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기업의 환경성 강화 등 지속가능발전을 확산해 나갈 계획인데 환경에 영향이 큰 국가 주요부문 정책 및 지방행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여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해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무역 장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서도 "기후변화협약대응 제4차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환경산업을 국가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원의 순환과 친환경적인 이용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폐전기·전자·자동차등의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등 물순환체계 구축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확대를 통한 국민의 친환경적 소비촉진 및 친환경경영 제도화 등 기업 활동의 친환경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어느덧 환경부는 장년이 되었다. 환경부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국민의 쾌적한 삶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